



환경산업지원 및 육성방안



김 덕 우
환경부 환경경제과장

I. 환경산업연망

1. 환경산업의 정의

환경산업이란 산업활동이나 일상생활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측정, 사전저감 및 사후처리 등에 관련되는 제품이나 설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자원을 지속적으로 보전·유지하기 위한 산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OECD의 분류에 의하면 오염방지기기를 제조하는 환경설비산업(Environmental Equipment)과 환경설비를 이용하여 환경질을 개선시키는 환경서비스산업(Environmental Service)으로 분류되며 국내법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는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을 응용·활

용하여 환경시설 및 환경측정기기등을 설계·제작·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세부 업종 종류는 다음과 같다. (표1 참조)

2. 환경산업의 특성

환경산업은 환경개선이라는 공공복지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설비등을 담당함으로써 공공재적 특성이 있으므로 정부의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환경오염의 발생과정, 특성 등 생산공정에 맞는 오염방지시설등의 설계와 설치를 요하는 주문생산·제작이 필요한 분야로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한 대량생산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

또한 환경설비를 단위기기만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복합설비가 이용되는 플랜트엔

(표1) 환경산업체 현황

업종	업체수	업종	업체수
총 11,770			
환경오염방지시설업	793	정화조청소업	578
차기측정대행업	125	분뇨처리시설,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 정화조설계·시공업	2,149
폐수처리업	43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	*1,148	분뇨정화조제조업	37
폐기물처리업(중간·최종)	190	유독물관련영업	3,537
폐기물재생처리업(허가·신고)	*1,796	폐기물운반선업	16
환경영향평가대행업	104	운행차검사대행업	349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	420	측정기기형식승인정도검사대행기관	5
분뇨수집운반업	456	환경영향조사대행업	24

* 환경백서('98)



지니어링의 특성이 있으며 정부의 규제정책 강도에 따라 시장수요가 창출되므로 국민의 환경질에 대한 욕구등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요구하는등 기술수요의 불확실성이 높아 새로운 개발투자에 대한 부담이 높은점이 있다.

3. 국내의 환경시장 현황 및 전망

미국의 EBI(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사의 조사에 의하면 '96년의 세계환경시장규모는 4530억달러로 매년 4%의 성장률을 감안할 때 2005년경에는 약 6,61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가별 환경시장 점유율은 세계환경시장의 80% 이상을 OECD국가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50대 환경산업체 가운데 미국이 15개로 가장 많으며 이들 50개기업들의 전체 매출액은 '94년기준으로 735억달러에 이르고 있다.(표2 참조)

(표2) 세계 50대 환경산업체 현황

('94기준)

국 별	기업수	매출액(억달러)	점유율(%)
미 국	15	240	33
프 랑 스	2	147	20
독 일	12	124	17
영 국	7	74	10
일 본	5	59	8
스 위 스	2	58	8
캐 나 다	2	23	3
오스트리아	1	5	< 1
네덜란드	1	5	< 1
합 계	50	735	100

* 자료 : EBI(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 1996

아시아지역의 환경시장규모는 세계시장규모의 20%수준인 약 1천억원 수준으로 낮은 수준이나 향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환경부문의 투자확대로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시아 즉, 개도국의 경우에는 주로 대기, 수질등 기초기반시설분야가 주요 투자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북미, 유럽등 선진국은 사후처리

분야보다는 청정기술을 요하는 사전예방기술에 의한 플랜트분야가 주요투자대상이 될 것이다.

국내 환경산업시장 규모는 특별히 조사되고 있는 것은 없으나 한국은행의 환경오염방지지출 측면에서 보면 '97년의 경우 약 8조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출 주체별로 보면 정부가 4조 3천억으로 전체 규모의 51%수준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부문의 투자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수질부분이 4조3천억원으로 약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행의 환경오염방지지출규모 추계는 가계부문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시설투자뿐만 아니라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순수한 의미의 투자수요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4. 국내 환경기술개발현황

우리나라의 환경기술개발은 선진국보다 약 20여 년 늦게 시작되어 전반적인 부문에서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환경기술은 대부분 선진국의 기술도입에 의한 운영기술 습득과 최적화로부터 시작되었으며 80년 이후 환경규제가 강화되었던 대기, 수질, 폐기물분야의 경우는 기술도입이 일찍 시작되어 기술수준이 선진국수준에 상당히 육박하고 있으나 청정기술, 생태복원등의 사전예방적기술이나 고도의 기술부문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이 분야의 기술개발이 향후 환경산업시장의 세계시장 진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3 참조)

(표3) 부문별 환경기술의 선진국 기술과의 대비수준 (%)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지하수	청정기술	지구환경	해양환경	생태	환경복원
30-70	30-60	20-60	30-50	20-30	30-50	20-30	10-20	10-30

* 자료 : KIST, 21세기 환경기술 장기종합계획('97. 7)

II. 환경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

1. 환경정책 측면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태동기는 1963년 공해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당시에는 경제개발 위주의 정책추진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정책은 부재였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80년대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의 개발정책 추진에 따른 후유증으로 환경오염문제가 야기됨으로 인하여 환경규제 특히 배출규제가 강화되어 민간기업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의 의무화를 계기로 환경산업체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개별기업의 경우 환경시설투자를 과외비용으로 인식하여 방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거나 형식적으로 설치함으로 인하여 환경설비분야 산업의 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으며 환경기초시설의 경우도 위생관리차원에서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정부부문의 투자만이 미미하게 이루어져 환경산업의 활성화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환경산업이 본격적인 관심대상으로 부각된 것은 90년 이후 환경청의 환경처로의 격상으로 인한 환경관리정책의 강화, 민간환경단체(NGO)의 활동증대 등으로 정부 및 민간부문 공히 환경분야에 대한 투자를 증대함으로써 환경산업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환경관리정책이 사후관리적, 단타적인 규제위주의 정책추진으로 지속성이 결여되어 꾸준한 기술개발을 요하는 환경산업체의 혼란을 야기시켜 전반적인 환경산업의 발달은 가져오지 못하였다.

이러한 단면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환경설비산업의 경우 규모면에서는 90년 이후부터 꾸준한 증가는 있었으나 전체 제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3%수준에 불과하고 총 매출액 규모면에서도 1.17%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며 기술개발 낙후 및 환경산업정책에 대한 정부관심 결여로 국내설비도 외국의 기술에 의존하였으며 산업체의 난립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실정에 있다.

또한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0.02%수준에 불과하여 환경기술개발투자도 GNP대비 0.021%로 선진국의 0.06~0.1%수준에 비하여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표4 참조)

(표4) 연도별 환경기술개발 현황

(억원, %)

구 분	'94	'95	'96	'97
GNP	3,030,000	3,480,000	3,734,819	4,303,308
환경 R&D 투자비율	0.016	0.015	0.019	0.021

2. 환경예산 측면

정부부문에서의 환경예산은 곧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을 의미하므로 이는 환경산업의 수요창출과 직결된다.

1980년의 경우 120억원으로 GNP대비 0.03%, 정부예산대비 0.18%수준에 불과하였던 환경예산이 90년 이후 대폭 증가되어 98년현재는 2조7,300억원으로 GNP대비 0.66%까지 증대되었다.

이는 OECD의 환경오염감소 및 방지를 위한 지출비율(PAC : Pollution Abatement and Control)인 0.6~1.0%수준에 육박하고 있지만 OECD제국의 경우 이미 환경기초시설을 거의 완비한 상태인 수준에서의 지출기준임에 비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까지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율이 낮은 경우에는 아직도 환경부문에 대한 정부예산의 대폭적인 증가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

3. 세제 · 금융 등 정부지원 측면

환경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환경설비부문에 투자하였을 경우 일정세액을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생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다.

또한 국내제작이 어려운 환경기기 및 기계등 88개 품목에 대하여는 관세액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수도권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고 있는 자에게 3~5년간 소득세, 법인세에서 30%~50% 감면하고 있으나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이용산업분야 등에 한정되어 있고 환경산업부문은 제외되어 있다.

금융지원의 경우도 중소기업의 방지시설 설치자금으로 600억원, 환경기술개발 및 산업화자금으로 6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활용 육성자금으로는 45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소기업등에 대한 지원은 최근 IMF 한파로 인하여 부도, 창업등이 부진하여 지원이 원활하지 못한 점이 있으나 예년의 경우 방지시설 설치자금은 3~4개월만에 소진되어 수요에 비하여 지원자금 규모가 너무 적은 실정이며 산업화자금의 경우 4~5개업체만이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어 개발된 기술을 국산화함으로써 수입대체 효과등을 높일 수 있는 지원자체가 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4. 환경산업 구조적인 측면

현재 환경산업체는 12개 법령에 의거 17개업종(11,770여개소)으로 세분화되어 있어 업종별 환경시장 규모에 비하여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내 환경시장 규모를 약 4조5천억원 규모로 추정해 볼 때 1개업소당 연간평균 매출액 규모는 3~4억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경우에도 일부 10%이하의 전문 또는 대형업소가 전체 수주액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는 명맥유지도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이들 업체가 방지시설등을 수주할 경우 덤핑에 의한 부실공사의 우려가 크며 자체적인 기술개발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어 전문성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우리의 경우 일본의 예에 따라 별도의 환경산업체를 인·허가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독일·미국등 선진국의 경우 별도로 환경산업체를 인·허가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고 엔지니어링,

설비분야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업체들이 환경시설설치시 기초조사, 설계, 시공, 운전 및 Financing 등을 포함하는 Full Service체제로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물론 각국의 환경관리 System에 따라 별도의 환경산업체 관리가 필요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하나 우리의 경우 각 개별법령에서 환경시장 여건 및 규제 체계등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종을 다양하게 규정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5. 시장정보 및 ODA등 공적 원조기구 활용측면

우리나라의 환경산업은 선진국보다는 기술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뒤진다고 볼 수 있지만 환경문제가 비교적 빨리 야기됨으로 인하여 나름대로의 시공 및 기술능력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한 사례들도 많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의 부문별 환경산업이 수요자와 외국 특히 수출이 가능한 동남아시아의 환경시장에 대한 정보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개발된 기술을 정보 부재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애로사항은 자금의 부족과 우리나라의 환경제품 및 설비에 대한 해외시장에서의 인지도가 낮아, 해외시장 진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표5 참조)

(표5)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해외시장진출 애로 요인 (%)

자금부족	시장정보	제품·설비 인지도	가격 경쟁력	기술·품질 경쟁력	수출·입 절차
29	35	15	4	4	12

* KOTRA('96), 100%기준

또한 세계은행, ADB등 국제기구에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환경산업분야의 Project에 대한 국제기구의 활용이 전무한 실정이다.

World Bank의 경우 도시 및 사회기반시설, 산업 및 에너지등 환경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금융지원을 연간 12억불정도 지원하고 있으며 ADB, UNDP, UNEP등 각종 국제기구에서도 환경분야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대한 정보부족과 관심부족등으로 이러한 ODA공적원조기구의 활용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III. 국내 환경산업의 지원 및 육성방안

1. 규제와 자본형성 위주의 추진정책 개발

환경산업육성을 위한 촉진정책은 환경을 보전하면서 발전을 유지하려는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환경관리제도에 있어 우선 사전예방적인 환경정책 수단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환경과 경제정책의 통합방안을 모색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ESSD)이 환경 및 산업정책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산업체의 육성을 위하여는 1단계로 건설등 타 산업과 분리하여 독자적인 산업으로 체계화되되 환경시설 건설을 위한 산업체계를 계획, 설계, 시공, 평가등이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환경산업체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는 환경산업부문이 대부분 건설이나 엔지니어링부문에 부설되어 운영되고 있어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는 우선순위에 뒤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는 방안과 영세한 환경산업체의 통·폐합등 구조조정을 통하여 환경산업체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따라 환경시장은 환경설비제조업자 중심에서 플랜트 사업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환경컨설팅, 설계·시공업, 위탁관리업, 환경평가업등으로 재분류할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업분야의 육성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환경시장은 환경규제와 공공부문의 환경투자 확대에 의하여 시장이 창출되는 만큼 법적 배출기준 및 각종 부과금제도의 현실화, 원인자 및 수혜자 부담원칙의 정립으로 환경투자 촉진유도, 총량규제 및 배출권거래제도 도입등 다양한 환경관리, 규제수단의 개발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환경관리제도의 체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환경시장의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의 현재 정부가 적용하고 있는 입찰제도의 경우도 대부분 시공실적만을 입찰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제한과 기술업체간의 담합에 의한 입찰이 가능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신기술평가를 획득한 업체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입찰심사제도에 있어서도 평가기준을 공사실적 중심에서 환경기술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대형 정부공사의 경우 환경부문공사를 별도로 분리하여 발주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환경기초시설의 민영화 추진

환경시설의 민자유치나 민간위탁관리는 환경산업의 수요창출을 위한 촉진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자유치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등 7개시설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 법령에 의한 민자유치사업 시행시는 세제 및 각종 부담금의 감면, 세제지원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인센티브제도도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민자유치시 전체사업비중 국고지원분을 제외한 지방비 부담분만 민자를 투입하므로 자본부담이 적고 운영시에도 개별이용자가아닌 시설주체인 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투자비를 회수하기 때문에 수익의 안정성등 민간기업의 Risk가 적은 장점이 있다.

또한 정부전체적으로도 SOC시설의 민자유치촉진을 위하여 시설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BTO

(Build-Transfer-Operate) 방식에서 민간이 일정 기간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BOT(Build-Own-Transfer) 방식이나 리스방식인 BLT 방식 등으로 다양화하고 투자수익율도 국제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기 설치되어 있는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 민간위탁부문도 현재의 IMF사태하에서의 민간기업의 경영위축등을 방지할 수 있어 민간기업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이다.

자치단체에서 직영할 경우보다 민간기업등에 위탁관리할 경우 운영비의 절감, 공무원 증원 소요억제등 정부입장에서도 유리하고 민간기업의 경우 유휴인력을 활용하고 현장운영을 통한 기술개발등을 할 수 있어 양부문 공히 유리한 입장에 있다.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민간위탁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시 환경기초시설부문을 최우선적으로 민영화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협의한 바 있으며 소극적인 자치단체의 형태를 불식시키기 위한 교육·설득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신규로 설치코자하는 환경시설의 경우 민간자유치로 설치코자 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국고보조 및 지방양여금을 우선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기존시설의 민간위탁시 운영경비 절감액에 대하여는 일정부문을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하는등 인센티브제도를 보장할 계획으로 있다.

3. 환경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지원 확대

환경규제는 그 형식과 실시방법에 따라 기술변화의 속도를 늦추기도하고 촉진시키기도 한다. 환경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는 공정이나 기술을 명시하지 않고 목표달성기준을 명시함으로써 목표달성 실행계획을 작성하여 기술개발 동기여부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으며, 환경규제와 기술적 요구사항과의 비교검토를 실시하여 규제·관리수준

을 설정하고 환경기술 정보보급과 기술자문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별로 분산추진되고 있는 각종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 5개년 단위의 범 국가적인 환경기술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각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환경기술개발이 상호 연계성과 체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국가차원의 환경기술개발은 G-7 Project 사업으로 추진중이며 현재까지는 기초기반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어 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토대로 실용화, 상용화 위주의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벤처형 중소기업에 우선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우수한 기술에 대하여는 환경신기술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환경시설공사 입찰시 우수신기술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그리고 각 부문별로 산재된 국내의 환경기술·정보를 체계화하여 공급과 수요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필요한 기술의 개발등을 위하여 「환경기술정보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동 센터에서는 국내외 환경기술정보의 교류를 확대하고 환경기술수집·보급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각종 환경기술정보의 데이터뱅크를 구축하며 이를 분석·가공하여 새로운 정보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다.

4. 환경산업의 수출진흥 및 외자유치 확대

환경산업은 전술한 바와 같이 21세기에 있어서는 모든 산업분야중에서 첨단산업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우리나라 환경산업체의 해외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는 기술력이 선진국에 비하여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 수출대상국가가 중국, 태국, 베트남등 신흥경제개발국가인 동남아지역을 대상으로 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진출분야는 폐수처리등 사후처리분야가 50% 수준이며 수출규

모도 동남아지역이 전체 수출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산업의 수출을 확대하고 외자유치를 통한 국내 환경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우수한 환경기술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개발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내 환경산업체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산업체의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며 해외환경산업시장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의 환경산업체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은 환경시장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국내의 환경시장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는 KOTRA와 협의하여 외국의 환경관련제도, 입찰제도, 환경투자계획등 시장정보를 수집하여 국내 환경산업과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환경산업수출촉진단을 구성하여 우리나라가 진출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세계은행, ADB등 국제금융기구가 개도국에 대하여 실시하는 환경산업관련 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우리나라의 대외협력자금인 EDCF자금지원을 확대하여 국내 산업체의 진출이 용이도록 하며 환경산업전시회, 박람회의 상호개최, 개도국 공무원의 환경기술연수 프로그램운영등을 통하여 수출을 촉진시키고자 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외자유치의 확대를 위하여는 선진외국의 우수기술과 자본을 유입하여 국내기업과의 컨소시엄구성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KOTRA의 외국인 투자지원센터와 협조하여 환경분야투자정보제공, 파트너알선, 투자애로사항 해결, 편의제공등 One-Stop 서비스체계를 갖추도록 할 계획으로 있으며 정부와 민간기업 합동으로 환경산업투자유치촉진단을 구성·운영하여 현지 설명회 개최 및 외국 개별기업과의 상담등을 통하여 투자를 권유하고 주한 각국 대사관과 협의하여 외자유치 Work-

Shop개최등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적극 유도할 계획으로 있다.

IV. 결론

환경산업은 향후 핵심산업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환경산업체의 육성은 정부와 민간이 협조하여 대외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WTO체제하에서는 환경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지원, 보조금지원등이 금지되어 있고 외국의 환경산업진출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이에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환경산업은 타분야산업과 달리 국내 환경법 제도에 의하여 시장이 형성되고 당해시설의 특성에 부합되는 Custom Design이 필요하며 종합과 학이 필요한 공정플랜트(Process plant)산업으로 민간의 시장원리에 맡길 수만은 없는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분야이다.

따라서 정부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다각적인 차원에서 국내 환경산업의 육성방안을 강구해 나감으로써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내 환경기술의 개발추진, 외국기술의 국산화 추진으로 인한 수입대체효과 거양, 국내 환경질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환경산업육성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